

오토바이 굉음에 잠 설치는 시민들 “괴로워”

광주경찰 단속 현장 동행해 보니

“소음기준법 허용 수치를 초과하셨습니다. 불법 튜닝 하셨죠?”

지난 9일 밤 9시 4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모아제일 아파트 앞. 불쾌한 굉음소리를 내뿜으며 지나던 오토바이 한대가 경찰의 정지 손짓에 멈춰 섰다.

오토바이 소음유발 행위 집중 단속 중이라는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멈춰선 오토바이 옆으로 광주 서구청 직원들과 한국교통공단 관계자가 다가갔다.

“소음 측정 하겠습니다. 4초 간 지속해주세요.” 오토바이 배기구 옆에 소음측정기 갖다 댄 서구청 기후환경과 직원이 말했다.

“우르릉 굉음” 가까에서 듣기 힘들 정도의 굉음이 터져나왔다. 인도를 지나던 시민들이 무슨 일인 듯 쳐다보면서 얼굴을 찌푸렸다. 소음측정 결과 112dB.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치인 105dB을 넘어섰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내가 불법 튜닝한게 아니라)중고로 샀다. 구조변경까지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놨는데...”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이 이날부터 광주 서구청, 한국교통공단 안전공단 등과 공동으로 오토바이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오토바이가 밤 늦도록 굉음을 울리며 돌아다니면서 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광주시 민원 게시판인 ‘바로응답’ 코너에는 지난 7월 ‘퇴근후 아파트 단지에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의 소음이 선을 넘은 것 같다. 아파트 단지에서 울리는 시끄럽고 불쾌한 오토바이 소음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밤 시간에 수원지구내 도로를 누비고 다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건가요?’라며

허용기준치 105dB로 너무 높아

100dB 굉음에도 단속 안돼

도주하면 붙잡기도 어려워

광주 울들어 민원 181건이나

허용기준치 내려 단속 강화해야

불만을 토로하는 신가동의 한 주민의 민원이 올라왔다.

당장, 광주시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도 급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181건(동구 37건·서구 6건·남구 14건·북구 27건·광산구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57건)에 견줘 3배가 넘는다.

이날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합동단속에서만 무려 오토바이 54대가 적발됐다. 다른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LED 등 불법 등화류를 단 경우가 39건, 경음기(경적) 위반 1건, 번호판 불량 6건, 미인가 안개등 설치 7건 등이었다.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울려대는 굉음 오토바이 단속은 한 대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단속 대상 오토바이가 굉음을 냈지만 소음측정 기준인 105dB을 넘어서지 않았다.

대다수 100dB 안팎으로 측정됐으며 104.6dB을 기록하며 아슬아슬하게 기준 수치를 넘어서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100dB은 기차가 철로를 달릴 때 선로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수준의 소음으로, 야간에는 시민들의 잠잠을 깨울 정도로 시끄러운 크기지만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이륜차의 소음 허용기준치를 105dB로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소음 허용기준치를 넘긴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 권한이다. 소음측정기가 없는 경찰의 직접 단속이



지난 10일 밤 이륜차 불법소음 합동단속에 나선 광주 서구청 직원들이 소음측정기로 오토바이 배기음을 측정하고 있다.

어렵고 단속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지자체 넘어가 처리되지만 쉽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00dB이 넘는 오토바이가 기준 수치 미만이라는 얘기에 지나가던 한 시민은 “이렇게 시끄러운데 105dB 넘지않아 처벌되지 않는 거면, 기준 수치를 낮춰야 하지 않나”며 불만을 표했다.

그대로 도주하면 붙잡기 쉽지 않은 점도 굉음 오토바이 단속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당장 이날 쌍촌역 일대에서 벌어진 현장단속에서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한 굉음 오토

바이 한 대가 경찰의 추격에도 유유히 도주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굉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 소음기 변형은 행정당국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구조변형 이력을 조회해 적발해야 하지만, 경찰 등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적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또 소음 기준(105dB)도 굉장히 시끄러운 수준이지만 현행법에 따라 적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최근 들어 허용기준치(105dB)가 높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스트 임수경 이사장 사표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임수경 이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스트 관계자는 11일 “임 이사장이 최근 과학기술정보부에 사표를 제출해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사회가 김기선 전 총장을 해임하고 김 전 총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있지 않겠느냐는 게 학교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2019년 10월 취임한 임 이사장의 애초 임기는 2022년 10월까지였다.

임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지스트 이사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임시 이사장을 선임한다.

임시 이사장은 이사 15명 중 최고 연장자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검찰 청사 흉기 난동 40대 구속



광주고검 청사에서 흉기를 휘둘러 검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11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광주고검 청사에서 흉기를 휘둘러 검찰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동부경찰은 1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48)씨를 구속했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나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 8층 복도에서 길이 약 1m인 칼을 휘둘러 50대 검찰공무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침묵을 유지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일본 전범기업들에 면죄부 주지 않도록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없애야”

시민단체들, 특별법 제정 촉구

민법 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민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소멸시효’ 제도가 일제 전범 기업에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특별법 제정에 나서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

해지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오는 10월 30일 이후에는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전범 기업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피고 일본 기업들은 3년이 다 되도록 법원 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국제인권법 조류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효과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한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소멸시효 문제로 소송이라는 지렛대가 사라지게 될 경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노동자 사망사고’ 사업주 항소심도 실행

유족 합의에도 징역 8개월 선고

산업재해 경각심 준 판결 해석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일하다 파쇄 설비에 끼여 숨진 20대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 해당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행을 선고받았다.

감형받긴 했지만 유족과의 합의에도 재판부가 집행유예 대신, 실행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1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에서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

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23건의 모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가운데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A씨 사건이 유일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유족과 원만한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항소심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가족을 통해 공개 사과했다.

재판부는 “2014년에도 노동자가 목재파쇄기에 압박사했음에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실행을 유지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 단 내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직원 B(27)씨가 파쇄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업체 대표로 충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